

# JB Weekly Web Magazine

| 2026.01.07

“ Your Gateway to Global Trade ”



## Contents

---

- 01 관세청, 부산 소재 석유저장시설 종합보세구역 신규 지정 p.1
- 02 '냉장 병어' 등 K-수산물 14억 중국 식탁에 오른다 p.2
- 03 K-뷰티·푸드 수출 급성장, 정부 수출 인프라 고도화 p.3
- 04 작년 우리 수출 역대 최대 실적인 7,097억 달러로 마무리 p.6
- 05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재 도입 ... 올해부터 2028년까지 3년간 시행 p.7

# 1 관세청, 부산 소재 석유저장시설 종합보세구역 신규 지정 ... 북극항로 진출 핵심 거점 육성

## 북극운항선·무역선 친환경 연료공급으로 무역선 입출항 및 물류유치 확대 기대

상원은북극 항로 선박에 대한 안정적인 연료공급을 위해 부산 남구에 소재한 41,087㎡ 규모의 석유저장시설이 1월 6일부터 종합보세구역으로 신규 지정됐다.

이번 지정은 북극항로 시대를 주도하는 K-해양강국 건설의 일환으로 부산을 입출항하는 무역선과 북극항로 선박에 대한 안정적인 연료 공급체계를 구축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추진됐다.

종합보세구역은 관세 등의 세금의 과세가 보류된 상태에서 외국 물품의 보관·전시·판매 또는 제조·가공 등 2가지 이상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정하는 보세구역으로 관세청장이 지정한다.

해당 석유저장시설에서 국내외 석유제품을 관세·유류세 등의 과세보류 상태에서 블렌딩해 친환경 선박 연료를 생산해 공급할 수 있게된다.

관세청은 2024년 국내 정유업계의 부가가치 창출과 수출 기회 확대를 위해 서로 다른 2가지 이상의 석유제품들을 혼합해 새로운 석유제품을 제조하는 작업인 석유제품 블렌딩 규제를 혁신한 바 있다.

<석유제품 블렌딩 예>



(자료 : 관세청)

이로써 그간 울산과 여수 등지에서 부산항까지 장거리 운송을 통해 공급하던 선박유를 부산에서 직접 블렌딩 해 바로 북극운항선과 무역선에 공급할 수 있게 돼 운송비용 절감과 시간 단축은 물론 입출항 무역선과 물류 유치 확대에 부산항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 최근 전 세계적으로 온실가스 감축 조치가 강화되며 선박 연료의 환경기준이 높아지는 가운데 이번 조치로 늘어나는 친환경 수요 선점, 온실가스 감축 기여, 신규 부가가치 창출, 북극항로 연료 공급체계 구축 등 1석 4조의 효과가 기대된다.

아울러 관세청은 북극항로 개척에 필요한 쇄빙선, 내빙선 등을 과세보류 상태로 건조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수요 증가에 따른 건조 장소 부족 등이 발생할 경우에는 보세구역 외 건조 작업도 적극적으로 허용하는 등 북극항로 개척을 적극 지원해 나가기로 했다.

## ② '냉장 병어' 등 K-수산물 14억 중국 식탁에 오른다

### 한·중 위생·검역 협상 타결, 우리나라 자연산 수산물 신규 품목 수출 확정

우리 바다에서 잡힌 싱싱한 냉장 병어가 14억 중국의 식탁에 오를 수 있게 됐다.

해양수산부는 1월 5일 한국산 어획 수산물의 대중국 수출을 위해 진행해 온 중국 측과의 위생·검역 협상이 최종 타결됐다고 밝혔다.

한·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최종 타결된 이번 협상으로 그동안 중국의 위생·검역 제도에 따라 수출이 제한됐던 냉장 병어를 포함한 우리나라 자연산 수산물의 중국 수출이 가능해지면서 중국 시장 진출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중국은 2011년 이전 수출 이력이 없는 수산물에 대해 품목별 위험평가 등 사전 허가 절차를 요구해 왔었다.

이번 약정 체결로 위생·검역 관련 제도적 장벽이 해소되면서 우리나라 자연산 수산물은 수출 생산시설 등록, 위생증명서 발급 등 약정에서 정한 요건만 충족하면 수출이 가능하다.

한편, 해수부는 생산과 수출 현장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관련 고시를 조속히 마련하고, 수산업협동조합 및 수출 업체를 대상으로 위생 관리 교육과 설명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해수부 박승준 어촌양식정책관은 "이번 협상 타결은 K-수산물이 중국 시장 진출을 확대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우수한 우리 수산물이 해외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위생·검역 협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3

## K-뷰티·푸드 수출 급성장, 정부 수출 인프라 고도화 “2030년 소비재 수출 700억달러 목표”

### 소비재가 바꾸는 수출 지형 ... 물류·인증·통관 경쟁력 강화가 관건

산업통상부와 관세청은 지난해 12월 29일 기준 연간 누계 수출액이 7,000억달러를 달성했다고 발표했다. 세계에서 여섯 번째로 기록한 성과로, 한국이 수출 강국임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반도체와 자동차 등 기존 제조업 수출이 견조한 흐름을 이어가는 가운데, K-뷰티와 푸드를 중심으로 한 소비재 수출이 역대 최대 실적을 경신하며 새로운 성장축으로 부상했다는 점이 이번 수출실적의 특징으로 꼽힌다. 정부는 수출시장 다변화를 이루려면 K-뷰티를 비롯한 소비재 수출에 주목해야 한다고 내다봤다.

#### 수출구조 재편하는 핵심 동력 K-뷰티

지난해 10월 경주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국민 방한에서 뜻밖의 인물이 화제가 된 바 있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이 경주 황리단길을 찾아 올리브영 매장에서 K-뷰티 제품을 구매한 뒤 자신의 SNS에 ‘South Korea skincare finds’라는 문구와 함께 제품 사진을 게시한 것이다. 영국 데일리메일을 비롯한 주요 외신들이 이를 앞다퉈 보도하면서, 단순한 인증샷을 넘어 K-뷰티의 글로벌 위상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됐다.

K-뷰티와 K-푸드는 이제 한류의 영향을 받은 반짝 수출의 결과물이 아니라 한국 수출구조를 재편하는 핵심 동력으로 자리잡고 있다. 실제로 K-컬처 확산과 맞물려 화장품과 농수산물 수출은 빠른 속도로 증가하며 글로벌 시장에서 성장성과 확장성을 동시에 입증하고 있다. 정부 역시 이 같은 변화를 수출구조 고도화의 기회로 인식하고, 소비재를 차세대 수출 주력 품목으로 육성하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는 2025년 11월 기준 우리나라 5대 소비재(농수산물, 화장품, 의약품, 생활·유아용품, 패션·의류) 수출액이 422억달러를 기록했으며, 2024년도 실적인 427억달러를 무난히 넘어설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화장품 수출은 전년 대비 11.4%, 농수산식품은 6.5% 증가하며 한류 연관 소비재 수출이 2년 연속 200억달러를 돌파했다.

화장품은 2년 연속, 농수산식품은 5년 연속 수출 100억달러를 넘어서며 소비재 수출을 견인하고 있다. 최근 10년간 우리나라 전체 수출이 32.2% 증가하는 동안 화장품 수출은 292.5%, 농수산식품 수출은 72.6% 늘어나 성장 속도 면에서도 압도적인 흐름을 보였다. 더 나아가 식품과 화장품 수출에서 중소·중견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각각 83%, 91%에 달하면서, 대기업과 중간재 중심이던 한국 수출구조가 중소기업·소비재 중심으로 다변화되고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 정부, K-소비재 수출 확대 방안 발표 “물류 인프라 구축”

이 같은 성과를 뒷받침하기 위해 산업부는 지난해 12월 24일 ‘K-소비재 수출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마케팅·물류·인증 등 소비재 수출의 핵심 애로를 해소하는 동시에, 프리미엄 K-소비재 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3

## K-뷰티·푸드 수출 급성장, 정부 수출 인프라 고도화 “2030년 소비재 수출 700억달러 목표”

### 소비재가 바꾸는 수출 지형 ... 물류·인증·통관 경쟁력 강화가 관건

먼저 해외 소비자 특화 유통·물류 지원이 강화된다. 정부는 2026년까지 해외 소비자가 직접 구매할 수 있는 글로벌 온라인몰 구축을 지원한다. 언어·결제 장벽과 반품 부담으로 역직구에 어려움을 겪던 중소 화장품 기업을 위해 번역, 결제, 해외 서비스센터 운영을 패키지로 지원하고, 자체 글로벌몰 구축이 어려운 기업은 역직구 대행 플랫폼과 연계해 해외 결제와 배송을 일괄 지원하는 방식도 도입한다. 또한 글로벌 홍보물 제작과 인플루언서 연계 마케팅, 외국인 역직구 고객 체험단 운영 등을 통해 실제 통관·결제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편 요소를 개선할 계획이다.

물류 인프라도 소비재 특성에 맞춰 고도화된다. 해외 주요 지역 10곳에 'K-소비재 물류데스크'를 신설해 교환·반품, 재포장·재출고 서비스를 제공하고, 해외 공동물류센터도 2026년까지 322개로 확대한다. 업계에서는 단순 보관·배송을 넘어 보다 정교한 물류 관리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한 유통사 관계자는 “화장품은 온도 관리와 품질 유지가 중요해 콜드체인을 포함한 풀필먼트형 물류 시스템이 필수”라며, “이 같은 인프라를 토대로 해외 소비자 대응과 브랜드 신뢰도 관리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 수출국 다변화로 규제 대응 관건 “해외 인증·지재권·품목분류 등 수출애로 해소”

수출 시장이 중국 중심에서 미국, 유럽연합(EU), 중동 등으로 다변화되면서 규제 대응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다. 미국이 지난해 8월 800달러 이하 수입품에 대한 소액면세제도를 폐지하는 등 갈수록 세계 각국의 장벽은 두터워지는 실정이다.

정부는 해외 인증과 라벨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수출바우처를 통한 인증·표기 지원을 확대한다. 국가표준원을 중심으로 1월 ‘소비재 인증 전담 지원반’을 구성하고 상반기에는 AI 기반 해외 인증·기술규제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해 국가별 규제 정보와 인증 절차를 종합 제공할 계획이다. 할랄 시장 진출을 위한 인증 지원과 전문 인력 양성, 할랄 전문무역상사 지정도 병행한다.

관세·통관 지원도 두드러진다. 지난 12월 31일 관세청은 화장품 품목분류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K-뷰티 화장품 HS 가이드북'을 발간했다. 성분과 용도에 따라 관세율과 수입요건이 달라지는 화장품 특성을 고려해, 완제·부자재·원료물질에 이르기까지 국제품목번호를 명확히 정리하고 실무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오류 사례를 제시했다. 이를 통해 수출입 과정에서의 관세 리스크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예를 들어, 시트 형태의 마스크팩은 제3304호(기초화장품)가 아닌 제3307호(기타화장품)에 분류되고 있으며, 아기 피부와 모발을 동시에 세정할 수 있는 울인원 제품은 제3401호(피부세척용 제품)가 아닌 제3305호(두발용 제품류)에 분류되고 있다. 울인원 제품의 경우 관세율표 제34류 주 제1호 다목에서 “비누나 그 밖의 유기계면활성제를 함유하는 것으로서 샴푸, 치약, 면도용 크림과 폼(FORM) ? 목욕용 조제품(제3305호·제3306호·제3307호)”은 제외하라고 규정하고 있기에 제3401호(피부세척용 유기계면활성제품)가 아닌 제3305호(두발용 제품류)에 분류해야 한다는 것이다.

3

## K-뷰티·푸드 수출 급성장, 정부 수출 인프라 고도화 “2030년 소비재 수출 700억달러 목표”

### 소비재가 바꾸는 수출 지형 ... 물류·인증·통관 경쟁력 강화가 관건

이명구 관세청장은 발간사에서 “이번 가이드북이 한국 화장품 기업들이 복잡한 통관 장벽을 넘어 세계 시장으로 뚫어 나가는 든든한 나침반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K-소비재 수출 확대를 한국 수출 역사에서 구조적 전환점으로 평가하고 있다. 2년 연속 7,000억달러 수출 달성을 이어가는 동시에, 2030년까지 K-소비재 수출 700억달러 달성을 목표로 수출 다변화와 인프라 고도화를 지속해서 추진할 방침이다.

4

## 작년 우리 수출 역대 최대 실적인 7,097억 달러로 마무리, 무역수지는 역대 2위 기록

### 김정관 산업부 장관 "2년 연속 7,000억 달러 달성 위해 모든 역량 집중"

2025년 12월 수출이 전년 대비 13.4% 증가한 696억달러, 수입은 4.6% 증가한 574억 달러를 기록, 122억달러 무역수지를 흑자를 기록했다.

수출은 전 기간 중 월 역대 최대 실적인 696억 달러를 기록하며 7개월 연속 해당 월 역대 최대 실적을 경신했다.

일평균 수출도 29억 달러로 12월 기준 역대 최대 실적을 나타냈다. 수입은 에너지 98억달러, 비에너지 476억달러로 무역수지는 전년 같은 기간 대비 57억 달러 증가한 122억 달러 흑자로 11개월 연속 흑자를 이어갔다.

이로써 2025년 수출은 전년 대비 3.8% 증가한 7,097억 달러를 기록해 사상 최초로 7,000억 달러를 돌파하며 역대 최대 실적을 갈아 치웠다. 일평균 수출도 4.6% 증가한 26억 4,000만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달성했다.

수입은 반도체 제조장비 등 비에너지 수입은 증가한 반면 유가 하락 영향으로 에너지 수입이 감소해 보험세를 기록했다. 무역수지는 전년 대비 262억달러 개선된 780억 달러 흑자를 기록, 2017년 952억달러 흑자 이후 최대 흑자 규모를 달성했다.

2025년 우리 수출은 반도체·자동차·선박 등 주력 품목의 강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전기기기·농수산물·화학품이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하며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자리매김했다. 수출 지역도 미국·중국으로의 비중은 감소하고, ASEAN·중남미·CIS 등 지역으로의 비중이 증가하며 다변화 추세를 보였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지난해 수많은 역경을 이겨내고 수출 7,000억 달러 시대를 열어준 우리 기업인과 노동자 여러분의 헌신적인 땀과 열정에 깊은 경의를 표한다"고 밝히고, "올해도 수출 우상향 흐름을 유지하기 위해 M.AX(제조 AI 전환) 전략을 필두로 산업 혁신을 가속화하여 우리 수출 산업의 근본적인 체질을 개선하고, AI 반도체 등 첨단·신산업 육성에도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김장관은 "역대 최대 규모인 275조원의 무역보험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중소·중견기업 대상 마케팅·물류·인증 등 수출 현장 애로를 끝까지 해소해, 2년 연속 7,000억 달러 달성 및 지난해의 최대 실적을 넘어설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5

##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재 도입 ... 올해부터 2028년까지 3년간 시행

### 1월 중 시행 계획으로 도입 품목은 기존과 동일한 수출입컨테이너·시멘트로 동일, 운임은 인상

2022년 일몰됐던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가 3년의 공백기 이후 다시 추진된다. 도입 품목은 기존과 같은 수출입 컨테이너와 시멘트로 동일하다.

국토교통부는 1월 7일 2026년에 적용되는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을 1월 중에 확정해 고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는 낮은 운임으로 인해 과로와 과적·과속 운행이 관행화돼 온 화물운송시장에서 화물운송 종사자의 근로 여건을 개선하고자 화물운수종사자 및 운수사업자가 지급받는 최소한의 운임을 공표하는 제도다. 운송 품목은 수출입 컨테이너와 시멘트 품목으로 2020년 3년 일몰제로 최초 도입됐다.

국토부는 제도 일몰 이후 화물차주의 소득 불안정이 심화되고 과로·과적 등 안전 문제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자 국회 논의를 거쳐 제도가 재도입됐다고 설명했다.

재도입되는 안전운임제는 제도의 시행 효과를 객관적으로 검증하고 사회적 합의를 도모하기 위해 기존과 동일한 품목에 한정해 2026년부터 2028년까지 3년간 다시 시행된다.

《 2026년 화물자동차 안전운임 개요 》

구 분	내 용
운임종류	- 안전운송운임 : 화주(수출입기업·제조업체 등)가 운수업체 또는 화물차주에게 지급 - 안전위탁운임 : 운수업체가 화물차주에게 지급
도입품목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특수자동차로 운송되는 수출입 컨테이너, 시멘트
위반시 처분	안전운임보다 낮은 운임 지급시 과태료 500만원

(자료 : 국토교통부)

이번 운임제는 작년 8월 「화물자동차법」이 개정된 직후 국토부가 안전운임위원회를 구성·운영해 1월 7일 최종 의결됐다.

운임 수준은 2022년 안전운임제 일몰 이전에 고시된 운임과 비교할 때 수출입 컨테이너 품목의 경우 화물차주가 지급받는 안전위탁운임은 13.8%, 화주가 지급하는 안전운송운임은 15.0% 수준으로 인상됐으며, 시멘트 품목 역시 화물차주가 지급받는 안전위탁운임은 16.8%, 화주가 지급하는 안전운송운임은 17.5% 수준으로 인상됐다.

또 험로·오지 운행 등 운임 할증이 필요한 경우와 그 적용 방법에 관해 규정한 부대조항을 보다 구체화함으로써, 운송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에 대해 안전운임의 현장 적용성을 제고하는 등 부대조항도 보완했다.

한편 정부는 안전운임제가 3년의 공백 이후 다시 추진되는 점을 고려해 현장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기반 마련에 주력하기로 했다.

우선, 안전운임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안전운임보다 낮은 운임을 지급받거나 운임이 미지급되는 사례를 접수하는 안전운임신고센터(www.safetruck.go.kr)를 확대 운영한다. 이를 위해 신고센터의 전문인력을 확충(전문 상담인력 1→3명 이상)하고, 신고 접수 이후에는 지자체와 협업하여 과다·반복 신고 사항에 대한 합동조사를 실시하는 등 사후 관리에도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또 안전운임제가 3년 일몰제로 운영됨에 따라 제도의 지속성에 대한 불안정성이 크고, 수출입 컨테이너·시멘트 품목에 한정돼 다수 업종의 화물차주가 제도 적용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다수 제기되고 있는 만큼, 정부는 제도의 영구화 및 품목 확대를 포함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하고, 제도 개선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